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부담 덜어드립니다

- 상환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연계 등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1811-365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에서 상담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9월 22일(화) 밝혔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그러나 최근 정책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상환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상환 차주에는 중진공·소진공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에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여 원금 조정·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일정 이행 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1년 근속 시 0.5%p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1811-3655)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하여 상환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장세훈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4-204-7524)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21)
		담당자	사무관	장용희	(044-204-7861)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완욱	(044-204-7540)
		담당자	사무관	오 건	(044-204-7548)